

투데이 칼럼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북 한의 개혁개방 문제는 김정은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당근 보따리를 헹겨 북한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 개발을 꾀할 수 있다. 반면 핵과 미사일을 거머쥔 채 다시 지루한 협상이나 벼랑 끝 진술 쪽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 담판은 한후 북한 체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일이다. 김정은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위원장은 집권 9년 동안 핵과 미사일 도발, 권력 기반 다지기, 경제 건설 추진 등을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리더십 발휘와 체제 유지에 자신감을 가졌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체제 생존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을 거치며 북한이 70년 넘게 '원수'로 여겨 온 국가다.

북한은 그런 미국에게 '체제 인정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름 대북제재 속에서 체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문제는 비핵화가 결코 애매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미·국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핵 폐기'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사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북한 체제를 개혁·개방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모았다.

집권 첫해인 2012년 7월 부인 이설주를 대동하고 관람한 모란봉 악단 창단 공연 무대에는 미카미우스와 꼼돌이 푸 같은 미 월트디즈니의 캐릭터가 대거 등장했다. 주변에서는 여덟 적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나설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듬해 2013년 12월 고모부 장성택을 무참하게 처형하는 등 잔혹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폐쇄적이고 호전적인 북한 최고지도자로 낙인을 찍혔다.

물론 김정은도 민생 행정기와 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제시했다. 집권 100일을 맞은 2012년 4월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한 첫 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공언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노동당이 통제하는 공장·기업소 등 경제 단위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6·28 개혁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5월에는 경제개발구법을 만들어 중앙급 경제특구(5개)와 지방급 경제개발구(22개) 등 모두 27곳을 지정했다.

2013년 3월 말엔 노동당 전원 회의를 통해 '경제·핵·병진노선'을 제시하기도 했다. 핵보유로 재래식 무기인 전차와 핵정·전투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으나, 국방비를 인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사회보장에 투입하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

사에 무게가 실린 병진노선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는 해상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던 유조선 환적 행위까지 주적했다. 중국미제 등을 들었다.

최고인민회의가 발표한 북한 예산 집행 결과에 따르면 16% 수준의 국방비비중은 병진노선 제시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더욱이 북한의 국방비는 실제로 온나예산을 포함해 30% 정도일 것으로 정부 당국은 추산하는 바탕이다.

결국 5년 만에 경제·핵·병진노선의 포기로 선언하고 경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한다는 전 제제의 평문을 전 모협임수 있다. 이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사회주의 개혁·개방의 노선을 택하는 일이다.

김일성 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업한 지 70년 동안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이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으로 나설 수 있을지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하고 실제 이행하느냐에 달렸다.

할아버지 김일성도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지상나원'은 공수표가 됐다. 현실은 차기율 뿐이다. 더 이상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던 김정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닌텐도 월드 방문객 맞는 '슈퍼 마리오' 형제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뉴욕시에 위치한 로스엔젤레스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 '닌텐도 월드' 사전 공개 행사가 열려 '슈퍼 마리오' 형제가 방문객을 맞고 있다. 슈퍼 마리오 시리즈의 상징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닌텐도 월드'는 흥미진진한 명소와 놀이기구, 상점 등과 함께 17일 개장한다.

프랑스 노조 연합 '다음 달 7일 대대적인 파업'



지난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릴에서 정년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전국에서 이어지던 연금 개혁 반대 시위 참여 인원이 점점 줄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연합 전선을 구축한 노조들은 다음 달 7일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했다.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문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은 국민들이 직접 고향 기부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와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징은 기부 자체를 출형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부 대상도 고향 즉 주민등록상 출신지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시군에서는 도내 시·군 주민은 물론 전라북도 외 출형민에게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라북도는 도와 주민에게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도민들에게

도내 시·군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도와 출형민이 우선 시군에 납부하고 추가적인 납부를 전라북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금의 30% 이내

에서 담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4개 시·군·지역 특신품 세트, 지역상품권 또는 포인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 다양한 담례품을 개발할 필요 있다.

복지, 문화, 농업, 지역개발 등 지역 주민의 복리와 관계된 부처 협동으로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 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행정적 준비도 중요하다.

먼저 농어민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청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마케팅, 담례품 개발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추진은 단기적으로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부지를 향후 전북 이주로 유도하는 인구 유입 측면에 서도 의미가 있다. 전북고향사랑기부금의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에 나설 때이다.

기업의 안전 불감증 여전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 안전 불감증은 대한민국처럼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이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산재재해 발생 시 원천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사업장에서만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설 연휴가 이어졌고 기업들은 대거 휴업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중대재해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사고 만에 경기도 양주시 삼포산업 체육장에서 토석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열흘 뒤에는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도 비워지 않았다.

법 시행을 앞두고 법망을 빠져 나가기 위한 부서를 만들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는 일에만 급급했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지 않고 현장 소장이나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팸플릿 솔방망이 처벌만 이뤄지면서 중대재해는 반복돼 왔다. 안전 조직과 고용 구조를 비롯 권한이 있는 경영 책임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다는 것 만으로 위험 요소가 없어지지 않는다.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전제하지 않으면 절대 죽음을 막지 못한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